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의 ‘군함도(하시마탄광)
강제노역 명시’ 권고 등에 대한 일본의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733호)
- 양정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22호)

2021.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목 차

I . 제안 및 회부	1
II . 주문 및 제안이유	1
1. 배현진의원안(의안번호 제11733호)	1
2. 양정숙의원안(의안번호 제12022호)	4
III . 검토의견	10
1. 결의안의 제안취지	10
2. 결의안의 제안 배경	10
3. 주요 내용 검토	11
※ 참고자료	13
1.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경과 및 주요내용	13
2.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안	15

I. 제안 및 회부

1. 배현진의원안 (의안번호 제11733호)

가. 제 안 자 : 배현진의원 등 103인

나. 제안일자 : 2021년 7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27일

2. 양정숙의원안 (의안번호 제12022호)

가. 제 안 자 : 양정숙의원 등 68인

나. 제안일자 : 2021년 8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12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배현진의원안(의안번호 제11733호)

주 문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군함도 등 이른바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했던 '한국인 강제노역 인정 및 희생자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강제

노동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많은 한국인들이 군함도에 강제 동원되어 노역했음을 여전히 왜곡 및 은폐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개관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처참했던 노동환경과 학대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전시를 개최하는 등 역사적 진실을 숨겨왔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군함도에서 자행한 한국인 강제노역을 부정하는 점, 그리고 오히려 학대 사실을 숨기는 거짓 전시로 희생자들을 모욕한 점에 대해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즉시 역사왜곡 행태를 중단하고, 군함도 등재 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후속조치들을 속히 재이행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수많은 한국인을 군함도로 강제동원해 노역시킨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전시로 희생자 및 유족들을 모욕한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국제사회 앞에 공식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내의 전시물 중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역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물들을 역사적 진실만을 반영하도록 변경하고, 한국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할 2022년 이행경과보고서에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과 당시 열악했던 노동 및 생활환경에 대한 진실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조치들을 불이행함에 따른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함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또한 지속적으로 거부 할 시 유네스코에서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재 취소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네스코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15년, 수많은 한국인들이 처참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하며 목숨을 잃은 일본의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음. 당시 일본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

여 끌려가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당하였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 함으로써 등재가 결정된 바 있음.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본은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희생자들의 비참했던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이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규탄하고, 유네스코에 약속했던 후속조치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함.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군함도 세계유산 재검토 논의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

2. 양정숙의원안(의안번호 제12022호)

주 문

최근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통치시대(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노역과 인권침해를 알리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채택함.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하시마탄광) 등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동원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약속함.

당시 일본 대표는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면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등의 조치로 제대로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고, 한국을 포함한 적지 않은 나라가 국제기구에서 공표한 일본의 약속을 믿어왔음.

하지만 일본 정부는 UNESCO 결정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히 이행 해왔다는 거짓 주장과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노역 진실을 덮기 위한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

군함도의 UNESCO 등재 성공 이후,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은폐 조작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왔음. 특히 지난해 문을 연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메이지 시대 산업화의 성과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운 채 강제동원에 대한 자료도 강제노역도, 한국인에 대한 차별도 없었다며 일본만이 정당하다는 왜곡된 자료들을 빼곡히 채운 사실이 유네스코 조사에서 드러남.

이는 곧 일본 정부가 군함도의 UNESCO 등재에만 몰두한 국제적 사기극과 다를 바 없으며, 일본 스스로 인정한 역사를 다시 왜곡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는 것임.

이번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도 말까지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본의 과거사 감추기 등 그간의 반복되는 뻔뻔한 행태로 볼 때,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내놓을지는 의문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한국인 강제동원과 강제노역 등 과거 군함도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적반하장 행태는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함.

또한, 일본 정부가 군함도의 UNESCO 등재 당시에 했던, 강제동원 및 강제노역 사실 명시 등 군함도의 어두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속히 재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 근대산업유산에 관하여 2015년 등재 결정 당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동원 및 강제노역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 증언과 당시의 현실상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적극 반영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과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자신들이 스스로 인정한 표현마저 삭제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당장 멈추고 이번 UNESCO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왜곡된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에서의 동원은 일본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이고,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각 시설에서도 가혹한 노동이 감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증언이 나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 행위를 멈추고 UNESCO와의 약속을 적극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2022년도 말까지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할 이행경과보고서 내용에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동원 및 강제노역, 한국인에 대한 차별, 열악한 노동환경과 혹독한 노동 현장의 실상 등을 사실 그대로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이번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 이행에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을 감행할 시에는, UNESCO가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재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등의 잘못된 행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제 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역사적 진실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의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은 2015년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등재된 산업시설 23개소 중 하시마(군함도)탄광 등 7개 시설에서는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노역 피해가 발생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

2015년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결정문의 권고에 ‘세계유산위원회가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과 관련하여 일본 대표의 발언을 주목한다’는 각주를 명기하여 일본 정부의 약속을 결정문의 일부로 포함하였고,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발언한 바 있음.

일본의 2017년 제1차, 2019년 제2차 이행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결정문의 권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을 전시하고 있어 역사 왜곡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여 2018년 제1차, 2021년 제2차 이행경과보고서 점검 및 결정문에 일본 정부가 2015년 등재 결정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권고대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

정부가 당초에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인권에 반하는 세계유산 전시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독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강제노역 사실을 이해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제안취지

배현진의원 및 양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 두 건은 ① 일본 정부의 강제노역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을 규탄하고, ② 일본 정부로 하여금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한국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③ 일본이 제출할 이행경과보고서 내용에 강제노역과 관련된 사실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④ 일본이 위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재 취소 등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 및 유네스코¹⁾ 세계유산위원회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2. 결의안의 제안 배경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개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interpretive strategy)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에 일본 대표는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와 더불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답함.

1)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그러나 일본 정부가 2017년 및 2019년에 제출한 이행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15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도쿄 소재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음.

아울러, 일본 정부가 2020년 12월에 제출한 해석전략 이행현황보고서에는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 및 관련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근거가 불포함되었음.

이에 2021년 7월 개최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이 보존현황보고서 및 이행사항을 2022.12.1.까지 제출하여 2023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결정문이 채택됨.

3. 주요 내용 검토

일본 정부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및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는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에 일본 정부의 성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두 건의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봄.

다만, 두 건의 결의안에 대해 일부 표현의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봄.

먼저, 두 건의 결의안 모두 “군함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한국인의 강제노역 등 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23개 시설로 구성되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중 “군함도”를 포함하여 7개 시설에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군함도”를 특정하는 대신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는 한국인 뿐 아니라 중국인, 연합군 포로의 강제노역 피해도 발생하였고 유네스코 결정문(decision)에도 강제노역 피해의 대상을 “한국인 등”(Koreans and others)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강제노역 피해자로서 “한국인”을 특정하는 대신 “한국인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봄.

그 밖에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주문²⁾의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봄.

참고로, 우리 정부는 도쿄 소재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일반 공개 이후, 동 센터의 문제점 및 일본의 성실한 후속 조치 이행 필요성을 세계유산위원회, 유네스코 사무국, 세계유산센터, ICOMOS³⁾ 등에게 지속 강조해왔으며, 21개 세계유산위원회 대상으로 지지를 요청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조치 이행 현황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2) 양정숙의원안 주문 제4호에 언급된 “2022년도 말까지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할 이행경과보고서”의 경우, 이를 “2022년 12월 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이행경과보고서”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

【참고자료 1】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경과 및 주요내용

※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재구성

일시	경과	주요내용
2015. 7. 제39차 세계유산 위원회 (WHC)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개소 세계유산 등재 결정	-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 마련을 권고. - 일본 대표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키겠다고 발언.
2017. 12.	일본 제1차 이행경과보고서 ⁴⁾ 제출	- '1940년대 한국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노역'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 - 수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일본 산업을 지원'하였다고 언급됨. -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의 목적이 '강제노역 희생자 기념'이 아닌 '산업유산 보존을 위한 보급과 이해에 기여'로 변경됨
2018. 6. 제42차 세계유산 위원회 (WHC)	일본의 제1차 이행경과보고서 점검 및 결정문 채택	-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⁵⁾의 내용과 관련, △일본 대표의 발언을 포함한 2015년도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당사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권장하면서,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독려
2019. 12.	일본 제2차 이행경과보고서 제출	- 일본의 해석전략은 2017년 이행경과보고서 첨부 문서로 기제출했다는 입장 표명하고, 종합적 해석은 산업유산정보센터 완공 시점으로 발표를 보류. - 해당 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지속적 대화의 대상으로 '일본 관계부처, 지방정부, 유산소유자, 관리인 및 지역사회'를 언급하여 대한민국을 대화 관련 당사국에 불포함.
2020.6.15.	일본 정부 도쿄소재 ⁶⁾ 산업유산정보센터 일반공개	-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의 증언 및 자료 전시. - 전시 내용에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전무함.

일시	경과	주요내용
2020.12.	일본, 세계유산센터에 해석전략 이행 현황보고서 제출	- 일본은 정보센터 완공 시 해석전략에 대한 이행 현황을 종합 보고하라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석전략 이행현황보고서를 제출 - 동 보고서는 도쿄 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및 등재 당시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약속한 후속조치 및 관련 결정의 구체 이행 근거 불포함
2021.7. 제44차 세계유산 위원회 (WHC)	세계유산위원회, 일본의 이행경과보고서 점검 및 결정문 채택	- 2021년 6월 유네스코-ICOMOS 공동조사단의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점검 활동 환영(welcomes) - 당사국이 약속한 몇 가지 사항 및 위원회 관련 결정을 이행한 것에 대해 만족 - 그러나,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has not yet fully implemented) 강하게 유감 표명(strongly regrets) - 상기 감안,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이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는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할 것(fully take into account)을 요청(requests)

4)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서(SOC, State of Conservation Report)

5) WHC 42 COM 7B.10

6) 일본 근대산업시설은 나가사키현 하시마 소재이나, 산업유산정보센터는 도쿄도 신주쿠구에 소재함.

【참고자료 2】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안

※ 자료: 외교부

- (1-2항) 제39차(2015), 제42차(2018)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상기(recalling)
- (3항) 2021년 6월 유네스코-ICOMOS 공동조사단의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점검 활동 환영(welcomes)
- (4항) 당사국이 약속한 몇 가지 사항 및 위원회 관련 결정을 이행한 것에 대해 만족(takes note with satisfaction)
- (5항) 그러나,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has not yet fully implemented) 강하게 유감 표명(strongly regrets)
- (6항) 상기 감안,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이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는 공동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을 충분히 참고할 것(fully take into account)을 요청(requests)
 - a) 각 시설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전략
 - b)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c) 인포메이션센터 설립과 같이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
 - d) 유산의 OUV가 적용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 모두에 대한 해석전략과 디지털 해석자료 마련에 있어 국제모범사례
 - e) 관련 당사자 간 대화 지속

- (7항) 당사국에 업데이트된 보존현황보고서 및 상기 이행사항을 2022.12.1.까지 제출하여 2023년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further requests)

문 의 처
02) 6788-5268